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정부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 추진 농가 자율권 박탈 축산인들 강력 대응

최근 축산자조금법과 관련, 정부에서 축산자조금 사업기능 강화와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 제도 개편안’을 내

놓으면서 본회를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 놓은 개편안을 보면 자조금 사용용도를 기존 소비홍보 중심에서 수급조절 및 방역·환경 등으로 개선하고, 가격 상승 시기에 거출금 상향 논의를 의무화해 하락 시기에 수급조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조금을 자조금관리원으로 특수 법인화해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하고,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만 가지며, 거출·운영·폐지는 모두 관리원에서 진행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단서조항으로 정부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농식품부에서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자조금은 말 그대로 농가가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거출한 기금으로 자율성을 생명으로 하며, 소비·홍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명분으로 삼는 수급조절, 환경개선, 방역사업 위주로 개편할 경우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9년에도 정부의 법인화 시도는 큰 반발 속에 철회된 바 있다. 축산자조금의 모든 사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전국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승인후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자체감사와 농식품부, 기재부, 감사원 등의 다양한 감사를 받고 있다. 자조금을 특수 법인화하고 이사회 구성도 정부관계자를 절반 채운다고 하니 정부 산하에 축산자조금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기존 추진방향이 백지화되지 않는 이상 갈등의 골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자조금법이 처음 생겨날 당시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로 시작한 본래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 도래

슬기로운 대처로 AI 피해 없도록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기간이 도래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이다. 정부에 의하면 금

년에 국내 AI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보면 국내 AI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발생율이 1~8월까지 14.7%가 증가하였고 전파력이 강한 H5N1형이 대다수이며 유럽 야생조류의 6~8월 발생건수가 전년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방역당국은 예찰을 더욱 강화하며 세심한 주위를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검사에서 민간을 활용한 검사물량을 크게 늘리는 한편, 위험축종인 오리에 대한 강화된 예찰체계구축 및 사육제한을 늘리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위험수준에 비례하여 지역·농가 단위 차등화된 방역관리를 통해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큰 농장이나 다발지역 농가를 위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도 동일 시·군에서 3건 이상 집중 발생시 위험도 평가를 거쳐 지역별로 살처분범위를 유연성 있게 조정키로 하였다.

산란계의 경우 10만수 이상 대규모농장은 금년 10월부터 터널식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만수 이상은 통제초소 설치, 30만수 이상은 자율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시범도입하여 농장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방역시설의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한다. 축산차량 GPS가 그동안 화물차에서 승용·승합차까지 확대되면서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그러다보니 농가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 나온다. 거점소독조를 운영할 시 오히려 관리부실로 질병전파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농장 방역실태조사가 빈번하다보니 오염확률이 커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장을 방문하지 않고 자체보고를 통해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오리집단 사육지역 고위험군내 육계농장이 있을 경우 사육제한 명령을 적용해 농가에서 원할 경우 오리처럼 사육제한을 하고 이에따른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방역대에 묶여 출하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중 하나이다.

금년 특방기간 슬기롭게 대처하여 AI 피해없는 한해를 만들어보자. **양계**